



보 도 자 료

6.22(월) 브리핑시부터 보도가능

- 미래창조 금융
- 따뜻한 금융
- 튼튼한 금융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			
책임자	금융제도팀장 김연준 02-2156-9680	담당자	사무관 김정주 02-2156-9682	
배 포 일	2015.6.22.(월)	배 포 부 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10매

제목 : “칸막이 규제, 걸림돌 규제 제거하여 경쟁력 높인다.”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
- (소비자) 은행-계열사간 연계영업을 통해 은행창구에서 One-Stop 서비스 제공
지주내 Two Bank 이용시 입금·지급, 증명서 발급이 한 은행처럼 가능
- (지 주) 직원 겸직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그룹 인력의 효율적 활용 지원
해외시장 진출, 핀테크 등 신사업 투자 관련 걸림돌 규제 제거

I. 추진 배경

- 금융지주제도는 '00년 금융지주법 제정 이후 지난 15년간 국내 금융회사의 대형화, 겸업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,
 - 국내 금융지주의 사업포트폴리오 다양화, 그룹 시너지 창출 등 질적 성숙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음
 - 은행 이자수익에 크게 의존*하고 있으며, 해외시장·신사업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 노력은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
- * 4대 지주 이자수익 비중 85.5%, 금융지주 평균 ROE ('11) 10.7% → ('14) 6.4%
- 금융위원회(위원장: 임종룡)는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(6.2일)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
 -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
- ☞ 동 개선방안은 금융개혁 자문단 심의(6.10)와 금융개혁회의의 보고(6.18)를 거쳐 확정

II.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

〈 기본 방 향 〉

◆ 금융지주가 ① 그룹 전략 수립, ② 자회사간 시너지 창출, ③ 통합 리스크 관리 등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

- ①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과 겸직 관련 칸막이 규제 제거→고객에게 “One-stop 종합금융서비스” 제공
- ②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보공유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룹내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
※ 다만,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 허용 문제는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대국민 신뢰구축이 선행된 뒤 발전적 대안 논의
- ③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임직원 겸직 등을 용이하게 하여 성장성이 높은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
- ④ 핀테크, 대체투자 등 다양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화

현 황	정책방향	세부 추진 과제
겸업효과 창출을 어렵게 하는 금융 업종별 칸막이 규제	겸업 활성화	① 업무위탁 금지규제 대폭 완화 ② 직원겸직 허용범위 확대 ③ 미등기 임원 겸직허용 범위 확대 ④ 겸직·위탁절차 간소화
까다롭고 복잡한 정보제공 절차로 그룹 내 정보공유 및 활용 제약	정보의 공유·활용 촉진	⑤ 고객정보 공유절차 합리화 ⑥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 다양화 ⑦ 빅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촉진
해외법인에 대한 그룹의 자금과 인력지원이 어려워 해외법인 영업지원 및 조기정착에 애로	해외시장 진출 확대	⑧ 해외법인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면제 ⑨ 지급보증 등 다양한 자금지원 방법 허용 ⑩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 폐지
신사업 투자 가능 여부 불분명, 투자기구에 대한 선택 제약	신사업 진출 및 투자 확대	⑪ 핀테크 등 신사업 진출 지원 ⑫ 회사형 공모펀드 지분율 규제 폐지 ⑬ 손자회사의 PEF 지배 허용

※ 즉시 추진 가능한 시급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개선하되, 법률 개정 등 중장기 과제는 금융개혁 자문단, 업계·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검토

- ① 업무위탁 금지규제를 완화하여 계열사간 연계영업을 지원
- ② 직원겸직 규제를 개선하여 효율적 인력활용 지원
- ③ 미등기 임원도 등기 임원 수준으로 겸직범위를 확대
- ④ 위탁 및 겸직 절차를 승인(최대 30일)에서 보고(7일전)로 간소화

(1) 업무위탁 금지규제 대폭 완화

< 현장의 애로사항 >

- #1 A은행은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계열사인 A저축은행, A캐피탈사의 대출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, 현행 규정 상 은행이 대출계약 서류 접수 등을 위탁받을 수 없어 계열사 대출상품의 안내에 그치는 실정
- #2 지주 산하 Two Bank인 B은행과 C은행은 고객이 하나의 은행을 이용하듯이 입금·지급, 통장 재발행, 잔액증명서 발급 등을 통합서비스 하고자 하나, 현행 규정상 이러한 단순 업무도 위탁이 불가능

□ 엄격하게 제한*된 업무위탁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연계영업 활성화

* (현행) 비지주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대출계약 서류접수, 입금·지급 등의 업무도 위탁 금지 → 금융지주사 역차별로 작용

- ① 대출, 카드, 할부·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신청 및 서류접수 위탁을 허용 (단, 심사·승인은 위탁 제외)

* 다만,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(§45)에 따른 위탁규제를 준용

- ② 입금 및 지급서비스, 예금·채무잔액증명서 발급, 환전 등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가적 금융서비스의 위탁 허용
- ③ 고도의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한 신용위험 분석·평가 업무도 위탁을 허용하여 그룹내 효율성 제고

* 지주 소속 저축은행, 캐피탈사 등이 기업대출시 업무위탁을 통해 은행의 전문화된 신용위험 분석역량 활용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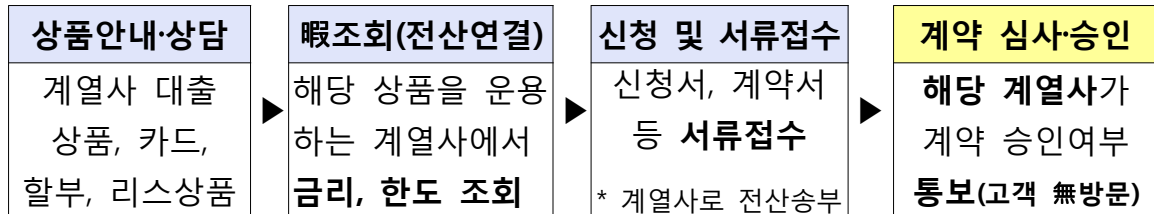
▶ 은행의 지점망*과 인력을 활용한 계열사간 연계영업 활성화 기대

* 금융지주그룹 소속 은행의 전국 지점망 약 4천개

①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은행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, 캐피탈과 연계한 대출서비스 제공 가능

- 고객은 대출상품 탐색비용과 대출사기에 노출될 위험 경감

<은행 지점에서 One-stop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절차>



② 은행창구를 통해 고객에게 One-Stop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가능

- 대출, 카드, 보험(방카), 할부·리스 등은 은행지점에서,
자산관리는 은행·증권 복합
점포에서 One-stop 서비스



③ 그룹내 Two Bank의 지점망을 공동활용하여 교차서비스 가능

* (예) 부산·경남은행 / 광주·전북은행 → 입금·지급, 통장재발행, 환전, 예금잔액증명서 발급, 대출계약·카드·할부·리스 계약 체결(심사·승인 제외) 등

(2) 자회사등간 직원겸직 허용범위 확대

< 현장의 애로사항 >

#1 D지주는 은행의 기업신용분석 전문가를 캐피탈사에 겸직시켜 캐피탈사 기업여신 평가능력을 향상시키고 외부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는 평가 수수료(건당 약 30만원)도 절약하려 했으나 엄격한 직원겸직 제한 규정 때문에 포기

□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겸직 규제를 합리화하여 그룹내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

* (현행) 59개 금융업무 중 51개 업무담당 직원은 다른 자회사등으로 겸직불가

① 핵심업무(28개, 별첨 20p참조)를 제외한 모든 업무 겸직 허용

- 심사·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(대출, 카드, 할부·리스 등) 판매업무의 겸직 허용

▶ 은행 창구직원이 겸직(또는 업무위탁)을 통해 원스톱 처리 가능

② 신용위험 분석·평가, 위험관리, 내부통제업무의 겸직을 허용

* 단, 위험관리, 내부통제업무는 그룹의 통합관리를 위해 지주사와 자회사등간 겸직은 허용하되, 이해상충 우려를 감안하여 자회사 상호간 겸직은 제한

▶ 그룹 전체의 신용평가능력을 제고하고 통합 관리를 강화

(3) 미등기 임원 겸직허용 범위 확대

-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겸직규제를 적용받는 미등기 임원 (전체 임원의 71%)에 대해 등기임원과 동일한 수준*으로 겸직 허용

* '은행-저축은행-카드사-캐피탈사' 간 겸직, 보험 및 금융투자 관련 경영부수업무 겸직 가능

< 겸직규제 개선의 효과 >

구분		현행	개선
임원	등기	대부분 겸직허용	대부분 겸직허용
	미등기	59개 중 51개 금융업무 겸직금지	대부분 겸직허용
영업담당 직원			28개 핵심업무만 겸직금지
신용평가, 위험관리, 내부통제 담당 직원		겸직금지	겸직 허용

(4) 업무위탁 및 겸직 절차 간소화

- 영업지원 관련 업무위탁* 및 지주-자회사등간 모든 겸직을 사전승인 (최대 30일 소요)에서 사전보고(7일 전)로 변경

* '대출, 보증, 할부리스 등' 각종 계약체결 신청서류 접수, 채권추심, 신용위험 분석·평가 등

▶ 금융지주사 인력의 35%를 차지하는 계열사 파견직원에게 대해 매년 사전에 겸직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 해소

- ⑤ 고객정보 공유절차를 합리화하여 정보유통을 촉진
- ⑥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을 다양화하여 통지부담 완화
- ⑦ 빅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을 촉진하여 시너지 창출을 지원

(5) 고객정보 공유절차의 합리화

< 현장의 애로사항 >

- #1 E지주의 고객우대서비스 담당자는 은행·증권·보험·카드 등 계열사 거래실적을 합산해 해당 고객에게 우대서비스(금리·수수료 할인 등)를 제공하여야 하나,
- 계열사간 정보 공유시 건별로 고객정보관리인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거래실적 합산이 지연되고 우대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할까봐 우려
- #2 F카드사 직원은 계열사의 고객정보 제공요청을 받는 경우 고객정보관리인 승인, 제공정보 관리 실태 점검 등의 실무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정보제공을 기피

-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시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여 그룹내 정보공유가 크게 위축('13년 34억건→'14년 12억건, 63% 감소)

<고객정보 공유시 주요절차('14.11.29 시행)>



- 필요한 규제는 유지*하되, 과도하게 복잡한 정보공유 절차는 합리화

* 고객정보 암호화, 필요 최소한 범위 내 공유, 목적 범위내 활용, 이용 후 즉시폐기 등

- ① 1개월 이내 정보공유* 및 '법규·국제기준 준수, 위험관리'** 목적의 정보공유는 고객정보관리인 사전승인 의무 면제

* 신용평가를 위한 정기적 고객정보 최신화 작업 등 정보공유 건의 약 1/4에 해당

** BIS 지표 산출·보고, 대주주와 거래 보고,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실태 조사·보고, 리스크 집중위험 점검 등

- ② 이용기간 적정성의 매월 점검의무는 매분기 정보관리 점검으로 통합

(6)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 다양화

< 현장의 애로사항 >

#1 (모든 지주 공통) 계열사간 정보제공 내역을 年 1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데, 이메일 주소 보유고객은 20~25%에 불과하고 **문서통지시 오발송에 따른 또다른 피해 발생, 막대한 비용**(4대지주 추산 460억원) 등을 우려

- ☐ 통지방법에 문서·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을 추가하고, 정보제공 내역의 “정확성·최신성” 유지를 위한 경우*에는 최초 통보 후에는 통지의무 면제

* (例示) 신용평가를 위한 금융거래연체 현황, 고객우대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래실적 등의 최신화

(7) 빅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촉진

- ☐ 지주사가 그룹내 빅 데이터를 집중·분석하여 위험관리,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사의 업무범위를 확대*

* ① 자회사등에 대한 위험관리, 영업지원 목적의 그룹 신용정보 집중관리, 활용, 제공 업무
② 금융지주 주도의 금융상품·서비스 개발 업무

3

해외시장 진출의 걸림돌 규제를 제거하겠습니다

- ⑧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 면제
⑨ 금융지주가 해외법인에 대해 자금지원(대출)뿐 아니라 보증도 허용
⑩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 폐지로 그룹 인력지원 촉진

(8) 자회사등간 해외법인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 면제

< 현장의 애로사항 >

#1 G지주의 자회사인 G은행은 베트남 진출을 추진 중이나, 신설 현지법인에 영업자금을 대출해 주려해도 신설된 현지법인이 담보력이 없어 자금지원이 어려운 상황

- ① **80% 이상의 지분 확보시 담보를 면제**하고 있으나, 외국인 투자제한*으로 국내 G은행이 30% 이상 지분 확보 곤란

* 은행 지분제한 : 베트남 30%, 인니 40%, 필리핀 40%, 말련 30%

- ② **해외법인 설립초기 2년간은 담보확보를 유예**하고 있으나, 2년만에 영업기반을 갖춰 대출을 상환하거나 담보를 확보하기 어려움

- ☐ 자회사등이 해외법인에 대출할 때 담보를 확보*(대출금액의 100% 이상) 해야 하기 때문에, 담보력이 없는 해외 신설법인에 자금지원 곤란

* 담보확보 예외

- ① 자금을 대여하는 자회사등이 해외법인의 지분을 80%이상 보유시 담보 면제
- ② 해외진출 2년 미만의 신설법인의 경우 2년간 유예

- ☐ 해외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자회사등이 해외 법인에 신용공여시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 면제

○ 다만, 위험관리를 위해 신용공여 한도규제*는 현행 유지

* 개별한도: 신용공여하는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%, 합산한도: 20%

- ▶ 지분율과 관계없이 적극적 자금지원이 가능해지고, 지역별(중화권, 동남아권) 거점 해외법인이 현지통화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활성화

(9) 금융지주의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 다양화

- ☐ 지주사가 해외법인에 자금지원(대출)만 가능하고 보증은 허용되지 않아 외화채권 발행, 외화자금 운용 등 비용 증가

- ☐ 금융지주사가 해외법인에 대해 자금지원(대출) 뿐만 아니라 '보증' 등 다양한 방식의 신용공여*할 수 있도록 허용

* 대출, 지급보증, 유가증권 매입,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·간접적 거래

○ 다만, 보증의 경우, 남발 시 부실전이 우려가 있어 한도를 설정

* 개별한도: 금융지주사 자기자본의 10%, 합산한도: 20%

- ▶ 지주 보증을 받아 해외법인이 현지통화로 자금조달 가능

(10)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 폐지

- ☐ 국내·외 계열사 직원이 다른 해외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(최대 30일) 받아야하는 절차를 폐지

○ 대부분의 국가*에서 임원(업무집행책임자 포함) 적격성 심사(Fit & proper test)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중심사 부담을 제거

* 영국, 미국, 호주, 싱가포르, 홍콩, 인도네시아, 중국 등

(11) 핀테크 등 신사업 진출 지원

□ 금융지주가 핀테크, 리츠 등 금융·실물 융합업종의 회사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을 명확히 규정

* (현행) 금융지주는 금융업 또는 '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업종'에만 출자할 수 있어 금융·실물 융합업종은 투자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

○ (핀테크 기업) 유권해석('15.5.6 발표)에 그치지 않고 투자가 가능한 핀테크 회사*를 법령에 명확히 적시하여 투자 활성화 유도

* PG, VAN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·관리회사, 자료처리·중계·전송 등 금융전산회사, 신용정보·Big Data·금융모바일앱·인터넷뱅킹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등

○ (실물투자회사) 리츠, 선박투자회사 등 부처별 개별 법률에 근거한 특수목적 투자회사*(私募)에 투자할 수 있음을 명확화

* 부동산투자회사(리츠), 선박투자회사,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, 엔지니어링집합투자회사, 로봇투자회사, 공간정보집합투자회사(위치정보 생산·관리 등에 대해 투자)

(12)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지분을 규제 폐지

□ 회사형 공모펀드*는 실질이 신탁형 펀드와 동일한 투자기구에 불과하므로 최소 지분율(상장사 30%, 비상장사 50%) 보유 규제를 면제

*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발행으로 모집한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상법상 주식회사형 펀드 → 청약·환매가 잦아 지분율 규제 준수 어려움

(13) 손자회사의 PEF 지배 허용

□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의 100%를 취득하여야 하나(☞무분별한 수직적 지배 방지를 위한 장치)

○ PEF는 그 성질상 규제준수가 불가능*하므로 손자회사가 PEF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선

* "지주-증권사(子)-자산운용사(孫子)"의 경우 자산운용사(GP)는 일반투자자(LP)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PEF를 설립할 수 없음

Ⅲ. 향후 계획

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추진 : 7월~9월

※ 입법예고, 규개위 심사, 법제처심사, 금융위원회 의결, 국무회의 의결 등

□ 시행 : 10월 중

< 과제별 필요조치 사항 및 추진일정 >

내 용	조치사항
1. 겸업 활성화	
① 업무위탁 금지규제 대폭 완화	시행령, 감독규정 개정
② 자회사등간 직원겸직 허용범위 확대	시행령, 감독규정 개정
③ 미등기 임원 겸직 허용범위 확대	시행령 개정
④ 업무위탁·겸직 절차 간소화	시행령 개정
2. 정보 공유 및 활용 촉진	
⑤ 고객정보 공유절차 합리화	감독규정 개정
⑥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 다양화	시행령 개정
⑦ 빅데이터 전략적 활용 촉진	시행령 개정
3. 해외시장 진출 확대	
⑧ 자회사등간 해외법인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 면제	감독규정 개정
⑨ 금융지주의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 다양화	시행령 개정
⑩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 폐지	시행령 개정
4. 신사업 진출확대 및 투자 다양화	
⑪ 핀테크 등 신사업 진출 지원	시행령 개정
⑫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지분율 규제 폐지	시행령 개정
⑬ 손자회사의 PEF 지배 허용	금융지주법 개정*

* 법률 개정은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여 일괄 입법추진

<별첨> 「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」 세부내용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